

부산·서울·창원· 영주, 도시재생선도지역 1차 사업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2014.11.12.

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1차로 부산시·서울시·창원시·영주시 등 4곳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정부는 2017년까지 4년간 이들 4개 지역에 1,100억 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12개 관계부처에서도 각 사업에 2,2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설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 금융의 활용, 건축규제완화 및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총 1,4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부산시는 북항과 부산역, 원도심을 연결하는 창조식플랫폼을 건립하고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입주시켜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근린재생형으로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송인동 일대는 봉제 산업의 침해와 8년간의 뉴타운 사업 지연에 따라 주민갈등과 주거환경 악화가 지속된 지역이다. 이에 재생사업에 있어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창원시는 지역예술가 등이 활동했던 구도심의 역사성을 살려 예술촌·공예촌 등을 활성화하고, 마산항 임항선 폐선로를 활용한 공원 조성 및 마산항 워터프론트 조성을 연계 추진한다.

영주시는 근대 한옥건물 등이 남아 있는 후생시장과 중앙시장의 경관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관광수요를 유치하고,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일상 속 소규모 건축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4.11.7.

국민안전처 소방제과
2014.11.21.

최근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담양 황토흙집펜션 화재사고 등 일상 속 소규모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긴급 시정조치를 취하고 관련법과 규칙 등을 보완하는 등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기구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는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규정으로는 하중, 배치, 높이, 미관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하중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중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 도로, 공원, 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함께 수록해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공공디자인 요소로서 활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시공 과정에서는 환기구 덮개의 급속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걸침턱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덮개의 규격 및 강도에 관한 제품기준을 명시하였다. 준공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안전한 이용과 관리의무가 건축주에 있음을 지도하도록 명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 대상에 환기구를 포함하여 계약하도록 하였다. 이들 내용은 환기구 외에 채광창, 장비 반입구 등 유사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에도 적극 반영토록 권고되었다.

민박 및 펜션형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전남 담양군 황토흙집펜션 화재사고를 계기로 민박이나 펜션형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전부터 주택을 이용한 민박이나 숙박시설에서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부서가 달라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시·군·구청 등의 도움을 받아 화기취급 등 시설 관리 상황을 일제 조사하여 불량시설에 대해 긴급 시정조치를 하고, 건축물 무단 설치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 조치하여 위험시설물 일제정비를 추진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한 후 소방시설 보강과 더불어 화재취약시설 및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점검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14.11.3.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의무절감을 상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2009년 제정되었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이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2017년까지 에너지 절감기준을 일시에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급작스러운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 절감률을 높였고, 그밖에 기타 미비점 등을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현 30%에서 40% 이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현 25%에서 30% 이상으로 에너지절감 기준이 강화된다. 에너지 의무절감을 상향을 위해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하였다. 최상층 지붕과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 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등이 추가되었다.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되었다. 효율적인 향 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가된 항목은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하여 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4건 승인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
2014.11.26.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출한 총 사업비 1,860억 원 규모의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4건이 승인되었다. 이번 사업은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나라키움 대학생 주택, 서대문세무서, 중부세무서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12월 착수하여 2018년 중반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군이 관리 중인 여의도 테니스장 부지에 건립되는 민관복합시설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은 공군관사, 지방이전 소속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관사와 함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 수익시설을 복합하여 예산투입을 최소화한다. 나라키움 대학생 주택은 2014년 3월 국유지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사업화한 것으로, 해상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저렴한 학생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강동구 성내동 일대에 건립되며 2015년 11월 말에 완공하게 된다. 서대문세무서와 중부세무서는 30년 이상 경과한 안전진단 D등급 이상의 노후청사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노후청사 건립비용의 일시투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청사 시설 안전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안전 및 대학생 주거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며 정부 필요시설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북구, 충북 충주 등, 2015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지구 10곳 선정

행정자치부 안전개선과
2014.11.11.

안전행정부는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과 침체된 구도심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생활권 주변의 차도를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공간으로 조성하는 2015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10곳을 선정했다.

사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행사업 선정위원회에서 현지 실사, 보행·교통량, 사고 현황 등을 분석해 선정했다. 상업·대학가·농어촌 등 유형별로 다양한 지역이 선정되어, 사업 후 보행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선사항은 보행량이 많은 주거·상업지역 이면도로의 보행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하향, 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 전용길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연계한 안전한 통학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어린이·노인 등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노면 평탄화, 전신주 지중화, 주차공간 확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등으로 보행여건 개선 등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7.8%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따라서 보행량이 많거나 교통약자 통행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본 사업을 실시,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단속 강화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 발족

전라남도 경관디자인과
2014.11.21.

전라남도는 지난 11월 ‘전라남도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공무원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이 주인이 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해 도내 22개 시·군의 선도 주민, 시민단체·전문가 등을 추가로 위촉해 700여 명으로 구성하였다.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은 앞으로 전라남도의 섬과 숲 등 역점 경관 시책사업에 대한 현장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상시 도내 청결활동, 불법적치물 및 광고물 정비 등 쾌적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 경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전남 경관의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결의문을 통해 경관이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를 위해 △전남을 공원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는 데 앞장서고 △남도 특유의 섬과 숲, 그리고 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매력 있는 전남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고 △자랑스러운 경관지킴이가 돼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선봉장이 되고 △전남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도록 좋은 경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제안된 아이디어를 경관 정책에 반영해 사업화하고, 추진단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의 위촉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자와 우수사업에 대한 경관상 수여,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미조성 공원, 민간사업으로 추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2014.10.29.

인천광역시시는 오랫동안 공원으로 지정만 한 채 조성을 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던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10만㎡ 이상의 미조성 공원 부지 중 민간공원 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면적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향후 공원에서 해제도 가능하다. 민간공원 추진자격은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사업비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할 경우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는 물론 토지주 조합, 개발회사 등도 자격을 갖춘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공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돼 민원의 대상이었던 도시공원의 해결을 위해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일부 부지에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특례사업이다. 지난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추진근거가 마련됐으나 그동안 시행 실적은 없는 상태였다. 최근에는 사업대상 면적이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민간공원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서는 1단계로 서구 왕길동 소재 검단중앙공원과 연수구 선학동 소재 무주골공원의 토지소유자 300여 명에게 민간공원사업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자치구와 협의해 7개소 정도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간공원 사업시행 시 토지소유자 우선 선정 및 공모방식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충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 밀그림 나왔다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2014.10.21.

충남도는 광역 차원의 중장기 건축정책 및 녹색건축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착수, 해당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도 건축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광역건축기본계획'과 전국 지자체 중 첫 번째로 수립되는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이 통합된 종합계획이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금까지 수행한 기초 자료 조사 및 분석결과와 상위 계획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 체계 등을 반영해 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의 3대 목표, 8개 추진전략, 19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충남의 건축·도시현황, 행정·재정여건, 시·군 담당 부서 참여의사, 사업의 중요도 및 예산대비 창출·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비전을 '충남다움, 어울림의 건축문화 창조'로 정하고 권역별 추진전략 및 6가지 핵심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6대 핵심전략 과제는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충남 공공건축 지원센터 운영 △충남 행복가꿈센터 설립 및 운영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건축투어프로그램 개발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재생방안 마련 △지역맞춤형 녹색건축 기준 마련 △건축교육 기반구축 및 참여기회 확대이다.

도는 과업 착수기간 중 시·군 실무자 워크숍,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 충남도 건축사회 공청회, 충남도 건축위원회 자문 및 심의, 도민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도출된 핵심전략 및 실천과제를 향후 내실 있게 추진해 역사와 공간, 도민이 어우러지는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